



01

통일정책

제1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 방향

제2절 통일정책 추진 환경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개괄

제1장 통일정책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였다.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어 많은 나라들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따른 소위 G2 시대의 개막으로 세계 정세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3대 세습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북관계 발전의 근원적 장애물인 북핵 폐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상호존중의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을 요구하였다. 또한 인류보편적 가치 추구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북한은 남북대화의 일방적 중단과 남북교류협력 차단조치, 대남비방·중상과 위협 등 강경조치로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였으며, 급기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50여 명의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무력 도발은 6.25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무력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

한의 도발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류협력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시행해 오고 있다. 다만, 「5.24조치」의 목적이 대북제재 자체가 아닌 북한의 변화를 통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민간교류 등의 유연화 조치도 병행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태도 변화 없이 위협과 평화공세를 반복하며 우리측에 남북관계 상황악화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대북정책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제1절 통일정책 추진 기본 방향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고, 안정을 유지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대화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남북관계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같은 협력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정책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의 안보와 남북 간 신뢰에 큰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해

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그간 성장해 왔던 남북 교류협력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매년 북한주민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식량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식량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또 그간의 남북관계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제협력과 인도지원 분야는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증진시키는 군사·정치 협력이나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분야는 성과가 미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근원적 장애물이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협력 확대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개방·3000」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북한이 핵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

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게 핵포기 시 얻게 될 혜택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적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대화를 통해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를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존중의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와 대비 태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존중없이 유리한 정세 조성을 목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로 나와야 한다. 남북 간 대화에 있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상호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회담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남북 간 호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셋째,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는 이미 국가와 세계사 발전의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간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했던 북한인권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0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통

일준비를 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제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과 평화통일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통일 구상으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이 제시되었다. 또한 통일재원 마련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와 통일논의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 노력이 통일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통일정책의 목표로 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② 바른 남북관계 정립 ③ 통일에 대한 준비를 설정하였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핵보유, 대외 고립, 선군 노선을 비핵·평화, 대외 개방, 주민 우선 노선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바탕으로 통일 미래를 위한 남북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하고 상호존중에 입각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통일재원 마련,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준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북한의 협력에는 협력하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에 정책 변화 여지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및 비정치·비군사 분야 중심의 교류 등 유연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년은 이러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진통의 기간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2절 통일정책 추진 환경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많아졌다. 세계 경제위기로 시작된 변화에 중동 자스민 혁명의 민주화 물결이 더해지는 등 세계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른 전세계적 교역·소비 위축이 신흥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고, 초강대국이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반면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안보 면에서도 급부상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두 나라가 우리나라 총 무역액의 31.3%(2010년 기준)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어 정치·경제 동맹의 두 축을 구축하였고, 중국과의 무역액은 급속하게 증대되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중국과의 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중의 부상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 등 정치·안보 분야에도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통일정책도 이러한 정세 지형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둘째, 중동의 민주화는 2011년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슈 중 하나였다. 중동 국가의 민주화 혁명으로 튀니지·이집트의 독재정권이 축출되었고, 리비아의 장기독재자 카다피도 최후를 맞았다. 민주화 도미노는 예멘과 시리아에까지 확산되면서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세계는 거스를 수 없는 민주화의 흐름을 목도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SNS)가 시민들의 결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보화와 개방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셋째, 북한은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이후로 3대 세습 후계 구축 작업을 지속해 왔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 60돌 군 열병식에 불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삼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인민군 대장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 이후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등에 동행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2월 30일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후계 체제 안착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져나갔다.

그동안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체제 내부 결속을 공고화하면서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하는 정치행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도모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 방중(2011년 5월 20일 ~ 27일), 방러(8월 20일 ~ 27일)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외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지나면서 의연하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¹⁾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동요없이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²⁾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변국과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정세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채널 복원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제3절 통일정책 추진 개괄

1. 원칙과 유연성의 통일정책 추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단행한 이후 북한은 대남위협과 도발, 폭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 2010년 11월 27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원칙적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8%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2) 2011년 12월 6일부터 9일간 실시한 통일부 4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63.4%로 이전에 비해 24.5%p 상승하였으며, 비정치적 성격의 방북 허용 조치에 대해서도 90.2%가 긍정적으로 평가(40.5% 현재수준으로 허용, 30.7%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용, 19% 더 많이 허용)하였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우리 정부의 정책전환을 압박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왔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유연화 전략을 병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무력 도발 근절을 위해 「5.24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 그 내용은 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② 남북교역 중단 ③ 우리 국민 방북 불허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⑤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5.24조치」가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0년 8월 북한의 수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8월 26일 대북통지문을 보내 수해 구호물자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고, 9월 4일 북측의 회신에 따라 쌀 5천 톤, 시멘트 1만 톤, 컵라면 300만 개 등 긴급수해지원이 10월 25일부터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1시간 넘게 지속된 포격은 군부대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택과 공공

기관 등의 건물도 심각하게 파손되어 주민들 대부분은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해야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의 군사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우리 정부는 사건 당일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며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추가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10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수해지원 물품 전달을 중지하고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하였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 국내외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특별 담화를 통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도 사건 이후 여론 조사에서 64.8%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찬성하였고, 57%는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³⁾ 유엔 및 미·EU·일·호주·프랑스·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어떠한 추가 도발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 2010년 11월 29일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 12월 2일 동아일보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당한 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해 왔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든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1.21 청와대 습격 사태, 아웅산 테러 등 북한 정권은 이미 두 차례나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민항기를 폭파해 1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을 이룬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과 의연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순국 사병들의 빈소를 찾은 신세대 청년들,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에 나선 시민들,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킨 국민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으로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장병들도 용감히 싸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습니다. 휴가를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에 들어 북한은 정부, 민간, 국회 등 전방위에 걸쳐 대화공세를 시작하였다.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1월 8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국을 포함한 정당·단체들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과 “당국 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어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1년 1월 1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대변인 논평 형식을 통해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북한이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통지문을 통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해 옴에 따라 2월 8일에서 9일까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가 “천안함 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언급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회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3월 17일 북한이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협의를 제의하였고, 3월 29일과 4월 12일에 걸쳐 남북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1년 6월 1일과 9일 양일에 걸쳐 5월에 있었던 남북비공개접촉을 폭로하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다. 비공개접촉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어 현 국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비공개접촉 폭로는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린 행위로 이에 대해 국내뿐 아니

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지구 내 우리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에 이어 2011년 4월 8일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 효력을 취소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기존 정령의 효력을 폐기하고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하 ‘특구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6일에는 우리 관광사업자들에게 관광특구 내 재산을 정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계약과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구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한 채 8월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측 재산을 몰수하고 반출금지와 인원 철수를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사회에 금강산 관광 및 투자 자제 요청 등으로 대응하였다.

2011년 9월 19일 제36대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가운데 유연하게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갈 것이며 꾸준히 북측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7월부터 시작된 남북·미북 비핵화회담의 흐름에 맞추어 한반도에 고조된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태도 변화와 남북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5.24조치」의 틀 내에서 인도지원 확대, 비정치적·비군사적 민간교류 허용, 개성공단 지원 확대 등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통일부장관은 11월 각각 방미(2011년 11월 2일 ~ 7일)·방중(2011년 11월 21일 ~ 23일)의 통일 외교활동을 통해 미국·중국 고위인사들과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10월 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엔 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31일부터 재개된 민간단체의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추진되었고, 종교 교류 및 개성 만월대 복원사업 등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이 재개되었으며, 개성공단 출퇴근도로 보수공사도 시작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고수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에는 우리 군의 연평도 도발 1주년 합동훈련에 대해 “청와대 불바다”를 운운하며 위협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유연성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유연화 조치를 지속해 나갔다.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북한 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 국무회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갔다. 통일부장관은 12월 20일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성탄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현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문단 방북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2.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 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6자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이 아닌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핵폐기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에 핵폐기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북한은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2009년 4월 5일 미사일 발사,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 14일과 25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2008년까지 동결·불능화 작업을 진행해 온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및 10.3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온 북핵 폐기 과정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0년 11월 12일 북한을 방문한 헤커(Siegfried Hecker)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은 2002년 제2차 핵위기의 시발점이 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북한은 핵위기 당시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진행해 오면서도 국제사회의 우라늄농축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고 2차 핵실험 등 핵상황이 악화되면서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고, 헤커 박사 방북 시 시설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헤커 박사에 의하면 북한은 실험용 경수로 건설, 우라늄 농축시설, 휴면상태의

5MWe 원자로를 공개하였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핵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과 이에 대한 준수·이행을 규정한 9.19공동성명, 그리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규정한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스스로가 한 약속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일이었다.

북한은 헤커 박사에게 동 시설을 공개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은 전력 생산용으로 건설 중인 경수로의 연료 조달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저농축 우라늄 시설임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기술은 고농축 우라늄과 핵무기 생산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 후 6자회담 재개 시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미국·중국 등 관련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6자회담이나 어떠한 협상도 무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6자회담의 신의를 저버린 북한에 대해 비핵화 진정성을 말아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였다.

먼저 2011년 1월 통일부 대변인 논평 형식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핵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1년 1월 19일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9

일 베를린에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할 의사를 밝히는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2011년 7월 22일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9월 21일 베이징에서의 2차 접촉으로 이어졌으며, 남북접촉과 번갈아가며 미북접촉도 2회(7월 28일 ~ 29일, 10월 24일 ~ 25일)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질적 진전이 있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중단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대화에는 임하면서도 사전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뉴욕 채널을 통한 실무접촉과 12월 중순 '대북 영양 지원' 관련 베이징 접촉 등을 지속하면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관련 협의는 지속되고 있다.

3. 인권·인도주의 가치 존중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2011년 6월 27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1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최악의 국가로 재지정하였으며,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

리덤하우스는 2011년 6월 1일 북한을 40년 연속으로 '최악 중의 최악' 인권 탄압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북한인권법은 현재 관계기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인도적 지원이 체계화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심리적·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08년부터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2011년 3월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념의 문제도, 정략의 문제도 아닌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였다. 2010년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였다. 2010년 8월에는 북한 신의주 지역 등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었다. 2010년 8월 26일 우리측 적십자사에서 북한에 “긴급 구호물자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쌀과 시멘트, 컵라면 등 수해관련 구호물자를 10월 25일부터 전달하였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을 때까지 컵라면 300만 개, 쌀 5천 톤, 시멘트 3천 톤 등 72억 원 분량이 전달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차원 인도적 지원을 모니터링 강화 조건 하에 2011년 3월 31일부터 재개하였으며, 2011년 11월 8일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재개하였다. 이를 통해 백신, 결핵약, 우유, 분유, 기초 의약품 등의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단, 분배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원 물품이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계기로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남북은 2010년 9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3회에 걸쳐 적십자회담을 갖고 행사의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한 다음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191가족 886명이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를 시도하였다. 일회성 만남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고향방문, 서신왕래, 나아가 자유왕래 등의 이산가족들의 분단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인도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후속 적십자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9월에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사무국이 12월 13일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

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시에 납북된 사람들은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는 제헌의원, 국회의원, 언론인 등 유력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12월까지 총 272명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명예회복과 송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1년 12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3,000여 명으로 2010년 11월을 기점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종합적 정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 5월부터는 재단 내 상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의료, 고용, 생활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정책 중점과제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활성화, 대상별 맞춤 서비스, 통일 미래 리더 육성으로 두고 있다. 전국 30여 곳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150명의 전문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취업 관련 등의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제2하나원도 건립 중이다.

4. 통일준비 추진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결과 반목이 반복되는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

했다. 천안함 폭침 등 현 남북관계의 상황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평화공동체는 「그랜드바겐」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구현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경제공동체는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남북 간 경제 격차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 간 경제통합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민족공동체는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복지를 보장하는 공동체를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법·제도의 통합 등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 내에서 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평화 및 경제공동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화해협력단계를 상정한 것이며, 민족공동체는 남북연합단계와 통일국가 단계를 통합 상정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평화공동체가 우선이며, 그 진행 단계에 맞춰 경제공동체 형성도 함께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재원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통일대비가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일대비 역량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통일 구현에 있어 재원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화두이다.

정부는 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 방안과 그 구체적 내용, 통일 재원과 관련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 그 성과를 종합해 나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통일 준

비 및 재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결집하였다. 그 결과로서 통일시나리오별 로드맵과 이행과제, 통일편익 및 비용 조달방안 등을 2011년 10월 7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고 통일재원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재원 관련 법제화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 참여를 통한 재원 적립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국내 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며,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